



기업과 환경보호

I.

오늘날의 환경오염은 대체로 이야기해서 인구의 증가와 산업혁명 이후의 급속한 개발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최근20년 동안에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구한 나라는 개발이야말로 환경오염의 주된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개발의 실질적인 행동자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사실상 환경오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데 이를 흔히 환경규제행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오늘날 각국의 환경법 규의 상당부분은 바로 기업의 활동에서 유래하는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의 미국의 법학분야 중 가장 빨리 성장한 분야 중의 하나가 환경법인데 아이러니칼하게도 환경법을 전공한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기업에 고용되어서 정부의 환경규제행정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환경규제행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까지는 정부는 환경보호대책에 미온적이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아 왔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환경문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대교수·법박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또한 이제는 더 이상 개발을 위하여 환경을 희생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이른바 “지배체제적 산물”로 보는 급진적인 시각마저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부와 독과점기업의 결합 구조가 오늘날의 환경문제를 초래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이 발생하게 된 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이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나 이 같은 시각이 오늘날의 환경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닐 뿐더러 문제의 해결이나 향상을 도모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되돌아 볼 것은 환경보호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II.

환경문제에 있어서 기업과 정부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다. 사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행정의 최우선적 과업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환경규제행정은 기업활동을 억제 또는 위축시킨다고 생각된다. 물론 환경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기업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와는 정반대로 기업은 다시 한번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활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70년대 중반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라는 미국 환경청의 명령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업계와 무연휘발유를 사용하는 저공해 자동차엔진을 고안한 것, 그리고 석면의 사용을 금지시키자 몬산토, 듀퐁, 등의 기업이 대체품을 개발한 것, 그리고 CFC의 스프레이에의 사용을 금지하자 듀퐁이 대체품을 개발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의 R&D의 자금여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의 기업들도 새로운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으며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분야의 기업활동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오염을 저감시킨 대체산업의 융성은 이같은 경우라고 하겠다.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서로가 동반자적인 위치에서 정보를 교환

하고 또한 공동적인 보조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행정당국은 규제행정이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점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은 규제행정을 기술혁신과 경영쇄신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은 보다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제행정 방식을 정부당국에 전의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기정화법이 채택한 “Bubble Concept”가 몇몇 중요한 기업이 스스로 고안한 경제성있는 규제 방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요컨대 정부와 기업이 상호협조하고 보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III.

1980년에 미국의 국무성과 환경평의회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西紀 2.000년의 人口. 資源. 環境報告書”는 다국적기업이 환경문제의 해결 노력에 참여 할 것을 촉구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기업가들이 자체의 자문위원회를 결성하여 인구. 자원.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과 제안수립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또한 기업도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982년부터 미국의 환경보호단체인 National Wildlife Federation이 “Corporate Conservation Council”을 설치하여서 이에 엑슨, 몬산토, 다우 케미칼 등이 참여하고 있음은 역시 주목할 만 하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다 할 전국적 규모의 민간의 환경보호단체가 제대로 성장하여 있지 못한데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오히려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경련 같은 경제단체가 환경분야의 학자와 관심있는 민간단체, 그리고 관계행정청의 중견간부를 망라하는 환경대책협의회를 창설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협력을 갖는 등, 환경문제의 이니시어티브를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여하한 형태로 간에 기업과 정부 사이에 환경문제에 대하여 공동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특히 아쉬운 것이 요즈음의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느껴진다. *